

제4장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제1절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

국토분단 등으로 인해 발생한 남북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하루바빠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국민의 정부」는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흠어진 가족·친척 방문단 교환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명기함으로써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이후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생사·주소 확인, 서신 교환 등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수많은 남북이산가족들에게 헤어졌던 혈육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주었다. 그러나 2001년 3월 이후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규모 확대와 면회소 설치 등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관계에 있어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부차원에서의 해결노력과 함께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는 이산가족교류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1.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2001년에는 한 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이루어졌다.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은 2000년 12월의 일정이 조정되어 2001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었다.

한편 2001년 9월에 개최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을 2001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방문단의 최종명단을 교환한 이후 북측이 일방적으로 연기를 통보해 옴으로써 2001년 12월말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고 있다.

가. 제3차 방문단 교환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은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2000.9.20~23)에서 2000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측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그후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2001.1.29~31)에서 2001년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교환하기로 일정이 조정되었다.

대한적십자사는 「인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산가족방문단 선정을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하였다. 「인선위원회」에서는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의 원칙 아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기준으로 2001년 1월 12일 후보자 300명을 컴퓨터로 공개 추첨하였으며, 이들 중 사망자나 건강진단 결과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북측에 생사·주소확인을 의뢰할 200명을 선정하였다.

2001년 2월 16일 남과 북은 생사·주소를 확인할 200명의 명단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북측이 의뢰한 200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여 단시일 내에 198명의 생사·주소를 확인하였으며, 북측은 우리측 의뢰자 200명 중 138명의 생사·주소를 확인하였다. 우리측은 생사·주소확인 결과를 토대로 연령과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최종방문자 100명을 선정하고, 2001년 2월 17일 남북간에 최종 방문단 명단을 교환하였다.

방문단 구성을 연령별, 가족관계별, 출신지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99~90세	89~80세	79~70세	69~60세	계
우리측	4	36	59	1	100
북 측	-	5	62	33	100
계	4	41	121	34	200
비율(%)	2.0	20.5	60.5	17.0	100

<가족관계별>

(단위 : 명)

가족관계	3촌이상	형제자매	처·자식	부모	계
우리측	14	45	40	1	100
북 측	-	69	19	12	100
계	14	114	59	13	200
비율(%)	7.0	57.0	29.5	6.5	100

<출신지별>

(단위 : 명)

구분	황해	평북	평남	함북	함남	서울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기타	계
우리측	25	15	22	1	14	-	8	8	4	1	-	-	2	-	-	-	100
북 측	-	-	-	-	-	12	21	4	10	8	11	4	14	12	2	2	100
계	25	15	22	1	14	12	29	13	14	9	11	4	16	12	2	2	200
비율(%)	12.5	7.5	11.0	0.5	7.0	6.0	14.5	6.5	7.0	4.5	5.5	2.0	8.0	6.0	1.0	1.0	100

<성 별>

(단위 : 명)

구분	남	여	계
우리측	72	28	100
북 측	91	9	100
계	163	37	200
비 율(%)	81.5	18.5	100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행사는 단체상봉, 개별상봉 및 참관 등으로 진행되었다. 단체상봉은 방문단 교환 첫날 약 2시간 동안 실시(우리측 : 서울 센트럴시티, 북측 : 평양 고려호텔)되었으며, 개별상봉은 둘째날 숙소(우리측 : 롯데월드호텔, 북측 : 고려호텔)에서 오전과 오후 두차례 약 4시간 동안 가족·친척끼리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가족동석 석식을 실시(우리측 : 롯데월드호텔, 북측 : 고려호텔)하였으며, 1·2차 상봉 때와는 달리 우리측은 가족동석 중식을 약 1시간 반 동안 실시하여 가족상봉시간을 확대하였다.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행사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일 정	· 2박3일(2.26~28)
상봉 횟수	·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2회, 송별상봉 1회, 동석 식사 2회
참 관	· 창덕궁(서울) · 만수대 창작사, 평양지하철, 동명왕릉, 평양교예단 공연(평양)
상봉 가족수	· 평양 방문자 100명이 재북가족 254명 상봉(1인 평균 2.5명) · 서울 방문자 100명이 재남가족 770여명 상봉(1인 평균 7~8명)
우리측 비용 (남북협력기금)	· 6.5억원
기 타	· 방북단에 국군포로가족 2명, 남북자 가족 1명 포함

나. 제4차 방문단 교환 추진

2001년 3월 북측이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부터 남북관계는 일시적 소강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4월초로 예정되었던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도 연기되어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한 남북간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01년 8월 12일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 30주년을 맞아 대한적십자사는 총재명의로 성명을 발표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고, 9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들의 교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2001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우선과제로 제기하여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9월 21일 인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선기준을 마련하고 컴퓨터 추첨을 통해 후보자 300명을 선정하였다. 우리측이 방문단 인원을 새로 선정한데 비해 북측은 그동안 세차례의 방문단 교환추진과정에서 생사가 확인되었으나 방문단에 포함되지 못했던 인원중에서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우리측은 후보자중 건강검진 결과 부적격자 등을 제외한 생사·주소 확인 의뢰자 200명을 확정하고 9월 26일 남북간에 그 명단을 교환하였다. 10월 8일 우리측은 북측이 의뢰한 200명 전원에 대해 남측 가족의 생사·주소가 확인되었음을 통보하였고, 북측은 우리측이 의뢰한 200명중 128명의 생사·주소가 확인되었음을 통보해 왔다. 생사·주소 확인결과를 토대로 가족관계와 연령을 기준으로 방문단 100명을 선정하여 10월 9일 북측과 명단을 교환하였다. 남과 북은 방문단 인원 확정작업과 함께 방문단 교환 세부절차에 합의하고 10월 12일 관련 문건을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위한 준비는 거의 마무리되게 되었다.

그러나 2001년 10월 12일 북측은 갑자기 미국 9.11 테러로 인한 우리측의 경계태세강화를 구실로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우리측은 당일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통일부장관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각각 보내 이산가족방문단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는 북측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간 합의사항은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였다.

10월 13일에는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우리측 방문단과 남측 상봉가족대표들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충격과 당혹감에 쌓인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방문단 교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은 남북간에 합의한 일정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11월 중순에 금강산에서 열린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합의사항 이행 일정의 재조정에 노력하였으나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는 못하였다. 12월 11일 대한적십자사는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위한 남북적십자대표 실무접촉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이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방문단 교환은 2001년 12월말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함께 남북이산가족의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교환도 이루어졌다.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생사확인 2000년 9월과 10월에 각 100명씩 2회, 서신교환은 11월중에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측의 내부사정으로 지연되어 오다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및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생사·주소 확인은 2001년 1월과 2월에 실시하고, 서신교환은 3월에 하기로 일정을 재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 생사·주소 확인이 2001년 1월 29일에 이루어져 1,199명이 생사·주소를 확인하였으며, 제2차 생사·주소 확인이 2001년 2월 23일에 이루어져 1,068명이 생사·주소를 확인하였다. 3월 15일에는 남북 각 300명을 대상으로 편지와 함께 1~2매의 가족사진을 동봉한 서신을 교환하였다.

가. 생사·주소 확인

(1) 제1차 생사·주소 확인

2000년 9월 26일 인선위원회에서 제1차 생사·주소 확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1·2차 이산가족방문단 최종 탈락자(90명)와 신청인 중 고령자 순(10명)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2001년 1월 29일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고 있던 금강산에서 남북간에 생사·주소 확인 회보서를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북측이 의뢰한 100명 중 99명에 대한 재남가족의 생사·주소를 확인을 하였다. 이중 98명은 생존자가 있었으며 1명은 사망 등으로 생존자가 없었다. 북측은 우리측이 의뢰한 재북가족 100명 중 86명에 대한 북측 가족의 생사·주소를 확인을 하였다. 이중 67명은 생존자가 있었으나, 19명은 생존자가 없었다. 1차 생사확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사확인자>

(단위 : 명)

구 분	생사 확인자		생사미확인자	계
	생존	사망 등		
우리측 의뢰자	67	19	14	100
북 측 의뢰자	98	1	1	100
계	165	20	15	200
비율(%)	82.5	10.0	7.5	100

<출신지별>

(단위 : 명)

구분	황해	평북	평남	함북	함남	서울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소계	미확인	계
우리측 의뢰자	19	12	25	4	9	-	8	6	1	1	-	-	-	-	1	86	14	100
북 측 의뢰자	-	-	-	-	-	14	13	5	14	4	7	14	14	10	1	99	1	100
계	19	12	25	4	9	14	21	11	15	5	7	14	14	10	1	185	15	200
비율(%)	9.5	6.0	12.5	2.0	4.5	7.0	10.5	5.5	7.5	2.5	3.5	7.0	7.0	5.0	0.5	92.5	7.5	100

<가족관계별>

(단위 : 명)

가족관계	3촌이상	형제자매	처·자식	부모	계
우리측 회보자	93	316	17	7	433
북 측 회보자	36	66	48	3	153
계	129	382	65	10	586
비율(%)	22.0	65.2	11.1	1.7	100

한편, 우리측이 의뢰한 재북가족 총 506명에 대해 북측이 회보한 인원은 총 504명이었으며, 생존자 153명, 사망자 222명, 확인불능자 129명이었다. 북측이 의뢰한 재남가족 총 483명에 대해 우리측이 회보한 인원은 총 654명이었으며, 생존자 433명, 사망자 206명, 확인불능자 15명이었다. 이 중에는 북측이 요청하지 않았지만 우리측이 확인해 준 추가 인원 177명이 포함되어 있다.

(2) 제2차 생사·주소 확인

2000년 10월 13일 인선위원회에서 결정된 제2차 생사·주소 확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첫째,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시 생사확인 의뢰자 200명 선정과정에서 신체검사 및 실사결과에 따라 제외된 자 둘째,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생사·주소확인 의뢰자 200명 선정과정에서의 탈락자, 셋째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중 고령자 순이었다.

남북 쌍방은 2001년 2월 23일 각기 100명의 제2차 생사·주소 확인 회보서를 상호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북측이 의뢰한 100명 중 92명에 대한 재남가족의 생사·주소를 확인하였다. 이중 91명은 재남가족 중 생존자가 있었으나, 1명은 사망 등으로 생존자가 없었다. 북측은 우리측이 의뢰한 100명 중 79명에 대한 재북가족의 생사·주소를 확인을 하였다. 이중 60명은 재북가족 중 생존자가 있었으나, 19명은 생존자가 없었다. 제2차 생사·주소확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사확인자>

(단위 : 명)

구 분	생사확인자		생사미확인자	계
	생존	사망 등		
우리측 의뢰자	60	19	21	100
북 측 의뢰자	91	1	8	100
계	151	20	29	200
비율(%)	75.5	10.0	14.5	100

<출신지별>

(단위 : 명)

구분	황해	평북	평남	함북	함남	서울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소계	미확인	계
우리측 의뢰자	15	7	12	4	9	2	5	5	8	2	3	-	4	1	2	79	21	100
북측 의뢰자	-	-	-	-	-	15	19	8	14	5	1	7	12	8	3	92	8	100
계	15	7	12	4	9	17	24	13	22	7	4	7	16	9	5	171	29	200
비율(%)	7.5	3.5	6.0	2.0	4.5	8.5	12.0	6.5	11.0	3.5	2.0	3.5	8.0	4.5	2.5	85.5	14.5	100

<가족관계별 생존자>

(단위 : 명)

가족관계	3촌이상	형제자매	처·자식	부모	계
우리측 회보자	95	245	14	2	356
북측 회보자	39	39	53	-	131
계	134	284	67	2	487
비율(%)	27.5	58.3	13.8	0.4	100

한편, 우리측이 생사확인을 의뢰한 재북가족 총 389명에 대해 북측이 회보한 인원은 추가확인 인원 27명을 포함하여 총 416명이었으며, 생존자 131명, 사망자 160명, 확인불능자 125명이었다. 북측이 의뢰한 재남가족 총 580명에 대해 우리측이 회보한 인원은 추가확인 인원 98명을 포함하여 총 678명이었으며, 생존자 356명, 사망자 250명, 확인불능자 72명이었다.

나. 서신교환

2001년 2월 24일 인선위원회에서 결정된 서신교환 대상자 선정기준은 1·2차 생사·주소 확인을 통해 재북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이산가족이 1순위, 1·2·3차 이산가족방문단 후보자로 재북가족의 생존을

확인하였으나 최종 방문단 선정시 탈락한 사람이 2순위, 이산가족방문단으로 재북가족을 상봉한 사람이 3순위 등이었다.

<서신교환 주요내용>

구 분	선정 결과	계
1순위	· 1차 생사·주소 확인자 63명 · 2차 생사·주소 확인자 59명	122명
2순위	· 1차 이산가족방문단 후보자 24명 · 2차 이산가족방문단 후보자 24명 · 3차 이산가족방문단 후보자 16명	64명
3순위	· 가족관계·연장자 순 114명	114명
계	300명	300명

우리측의 서신발신자는 70대와 80대를 중심으로 연령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서울·경기지역 거주자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북측은 60대와 70대를 중심으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신교환의 결과를 연령별, 거주지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

(단위 : 명)

구분	99~90세	89~80세	79~70세	69~60세	계
우리측	60	102	115	23	300
북 측	-	13	162	125	300
계	60	115	277	148	600
비율(%)	10.0	19.2	46.2	24.6	100

<거주지별>

(단위 : 명)

구분	황해	평북	평남	함북	함남	서울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계
우리측	-	-	-	-	-	88	110	19	15	26	4	5	6	22	5	300
북측	81	42	117	-	34	-	-	26	-	-	-	-	-	-	-	300
계	81	42	117	-	34	88	110	45	15	26	4	5	6	22	5	600
비율(%)	13.5	7.0	19.5	-	5.7	14.7	18.3	7.5	2.5	4.3	0.7	0.8	1.0	3.7	0.8	100

3. 이산가족문제 해결 기반 구축

가. 제3국을 통한 교류 지원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 등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는 1988년 「7·7선언」 이후 조금씩 진행되어 왔다. 정부는 2000년 3월 2일 당국차원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과 병행하여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를 보다 촉진해 나가기 위해 「이산가족교류 촉진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들의 북한주민접촉 승인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신고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이산가족 1세대 전체로 확대되는 등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다. 또한 이산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류경비 지원도 생사확인 80만원, 상봉 18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고 교류지속경비 4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경비지원 회수도 종전의 1회에서 최대 3회까지로 확대되었다.

<연도별 이산가족교류경비 지원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생사확인	41	1,720	89	4,030	119	7,490	83	7,645	332	20,885
상봉	55	5,024	142	12,240	91	15,740	120	24,000	408	57,004
교류지속					104	4,695	76	3,260	180	7,915
합계	96	6,744	231	16,270	314	27,925	279	34,905	920	85,804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괄목할 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9년 민간차원의 교류가 시작된 이래 2001년 12월말 현재까지 이산가족들의 재북가족 접촉승인은 총 16,145건으로 이중 15.7%인 2,527명이 제3국을 통해 생사를 확인하였으며, 771가족이 제3국에서 상봉하였다. 1998년부터는 개별적인 방북상봉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총 15건이 성사되었다. 2001년 한해 동안에는 생사 확인 208건, 서신교환 579건, 제3국상봉 165건, 방북상봉 5건이 이루어졌다.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 성사 실태를 살펴보면 친척·친지 등 해외동포의 협조, 국내 민간주선단체의 주선, 언론매체 활용, 국제행사 참가시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접촉방법별 성사 현황>

(1989.6.12~2001.12.31)

구 분		해외동포	주선단체	언론매체	국제행사 등	무기재	계
생사확인 (건)	2001년	96	63	4	44	1	208
	1989~2001	1683	450	126	109	159	2,527
비 율(%)	2001년	46.2	30.3	1.9	21.2	0.4	100
	1989~2001	66.6	17.8	5.0	4.3	6.3	100
제3국상봉 (건)	2001년	84	33	1	39	8	165
	1989~2001	565	97	24	75	10	771
비 율(%)	2001년	50.9	20.0	0.6	23.6	4.9	100
	1989~2001	73.3	12.6	3.1	9.7	1.3	100

교류의 중개지역은 초기에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을 통한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중개지역별 성사 현황>

(1989.6.12~2001.12.31)

구 분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기타	무기재	계
생사확인	2001년	187	9	6	2	4	0	208
	1989~2001	1,748	378	123	59	62	157	2,527
비 율(%)	2001년	89.9	4.3	2.9	1.0	1.9	0	100
	1989~2001	69.2	14.9	4.9	2.3	2.5	6.2	100
제3국상봉	2001년	165	-	-	-	-	-	165
	1989~2001	747	-	18	-	6	-	771
비 율(%)	2001년	100	0	0	0	0	0	100
	1989~2001	96.9	0	2.3	0	0.8	0	100

교류가 성사된 재북가족의 거주지역은 함경도가 1,631건(4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산가족교류 거점인 중국 연길 지방과의 지리적 인접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의 출신지별 성사 현황>

(1989.6.12~2001.12.31)

구 분	함경	평안	황해	양강	자강	강원	평양	개성	남포	기타	계
생사확인	1,184	552	319	73	34	49	175	35	37	69	2,527
비율(%)	47	22	13	3	1	2	7	1	1	3	100
상봉	447	108	55	65	8	10	37	2	13	41	786
비율(%)	57	14	7	8	1	1	5	-	2	5	100

제3국을 통한 교류는 이산가족들이 해외에 연고가 있고, 상당한 경비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교류당사자들의 신분 안전 등의 문제점이 수반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이산가족들이 비교적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993년부터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 주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인 또는 단체들에게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하였으며, 2001년말 현재 10여개의 이산가족 교류주선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나. 이산가족 행정서비스 개선

1998년 12월부터 정부는 이산가족자료의 영구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인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1년 5월부터는 이산가족찾기 신청자의 등록자료를 수시 점검하고, 교류현황자료를 전산입력 하는 등 기존자료에 대한 보완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 8월에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관리체계 정비작업을 통해 전산보안관리자 지정 및 처리체계 정비 등을 실시하였다. 10월에는 인터넷서비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사용자가 직접 편지사연을 소개하고 등록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찾기 서비스를 강화하고, 각종 민원서식과 온라인 신청서 변경·삭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이산가족들이 직접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유사 메뉴를 통합하고 게재내용을 갱신하는 등 기능도 한층 강화하였다.

한편, 이산가족통합센터에 등록된 자료를 대상으로 이산가족찾기를 시행하는 서비스(Internal Matching) 기능을 대한적십자사의 심인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는 남북 이산가족간의 만남 뿐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간의 만남도 주선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4. 납북자 등 문제 해결 노력

2001년말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자는 486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귀환한 국군포로와 북한이탈주민 등의 증언을 통해 국군포로 457명이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납북자·국군

포로 문제를 제기하고 북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해 왔다. 또한, 북측이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고 있다.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시 3명의 납북자·국군포로 가족이 포함되어 상봉을 실현시킨 바 있으며,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선정시에도 이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01년 4월 24일 통일부 직제개편시 납북자 및 국군포로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이산가족 1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북측을 계속 설득해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5. 이산가족교류 현황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2001년까지 당국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생사확인 3,025건, 서신교환 3,246건, 제3국 상봉 608건, 방북·방남 상봉 621건이 성사되었다.

특히,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한 이후 당국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교류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총계
민 간 차 원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2,527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6,716
	제3국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165	771
	방북상봉										1	5	4	5	15
당 국 차 원	생사확인	65											792	744	1,601
	서신교환												39	623	662
	방남상봉	30											201	100	331
	방북상봉	35											205	100	340

< 2000-2001년 교류 현황 >

(단위 : 건)

구분	이산가족 찾기신청	생사확인	서신교환	제3국상봉	방북상봉	방남상봉
2000	84,757	1,239	1,023	148	209	201
2001	5,116	952	1,202	165	105	100

제2절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1999년부터는 인도적 차원의 긴급구호와 함께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 등을 통해 식량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돕는 방향에서 비료지원 등 농업개발지원에 중점을 두고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같은 대북지원은 무엇보다도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동포애’의 정신을 구현한다는 당위적 측면과 함께 남북화해협력 실현이라는 실용적 측면의 의미를 지닌다. 대북지원은 북한당국과 주민 모두 시야에 넣고 추진하는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북한주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고 우리의 동포애를 전달함으로써 대남 적대감을 완화시켜 장기적으로는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가. 식량 및 의료 등의 지원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 등으로 매년 100만~200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소련 및 동구 공산정권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주의경제권의 축소와 1995년부터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북한의 경제와 식량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북한은 1995년 국제기구에 처음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 때부터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검토하였다. 정부는 1995년 5월 26일 통일원장관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식량난을 겪는 북한동포들이 현실적인 곤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민족복리 차원에

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 없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쌀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당국간 베이징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정부는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산 쌀 15만톤(1,850억원 상당)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한편 정부는 1996년부터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UN기구를 통한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활동에도 참여해 왔다.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대북정책 추진방향의 하나로 ‘북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의 탄력적 제공’을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남북 농업개발협력 및 경험 활성화 등을 통해 북한이 식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IMF 사태 등으로 우리 경제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UN기구의 대북지원계획 참여 요청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할 것을 결정하였다. 1998년에는 WFP를 통해 총 1,100만달러 상당의 옥수수 3만톤과 밀가루 1만톤을 지원하였다. 2000년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참여하여 2000년 3월 8일 북한지역 전염병 퇴치를 위해 국제보건기구(WHO)를 통한 50만달러 상당의 방역·보건의료 지원에 참여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WHO는 한국산 치료약제에 대한 사전 품질평가 미비로 현물지원이 곤란하다며 우리측에 현금지원을 요청하였으나 (2000.4.13), 우리측은 WHO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측이 우리 의약품 및 장비를 지원받을 의사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2001.1)

이에 따라 정부는 말라리아 예방·치료제 2종, 모기 방제장비 및 진단장비 등 지원물자를 2001년 5월 1일 인천을 통해 북한내 WHO사무소에 전달하였다. 46만달러에 달하는 말라리아 방역지원으로 북한내 말라리아 환자 및 위험지역의 1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우리측 지역에서도 말라리아 방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0년 9월 8일 정부는 북한의 대규모 식량차관 요청을 계기로 50만톤 식량차관 제공과는 별도로 외국산 옥

수수 10만톤을 WFP를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지원키로 하였다. 이는 북한의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인한 북한의 악화된 식량사정과 그동안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속적인 대북식량지원 참여 요청, 효과적인 대북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조 유지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중국산 옥수수를 구입하여 2001년 3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6항차에 걸쳐 북측 항구에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옥수수 포대에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우리가 지원하는 사실을 북한주민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었다. 옥수수 지원경비는 구입·수송비와 포대구입 등 부대경비 및 WFP 행정비 등을 포함하여 총 1,725달러(223억원)가 소요되었다.

한편, 2000년 3월 30일 주식회사 「태창」은 북측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2천만벌의 내의를 수출하고, 대금(1억6천만달러)은 7년거치 3년 균등상환키로 「연불수출입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태창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 이 계약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태창이 이미 하청업체를 통해 생산한 내의가 약 500만벌에 이름으로써 하청업체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일과 관련하여 하청업체는 물론 국정감사 및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등을 통해 국회에서도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차원에서는 종교계, 시민단체 중심으로 「북녘동포 내복보내기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였으며,(2000.12.20) 한적을 비롯한 대북지원 민간단체와 전북, 부산,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운동에 참여하여 모금운동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중소하청업체의 도산 위기 등 그 피해가 막대하고 국회에서도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내의가 북한주민 특히 노인 및 아동을 위한 인도적·동포애적 차원의 지원품목으로 적합한 점 등을 감안하여 아동용 내의 150만벌(368만달러 상당)을 구매하여 2001년 3월 20일 지원하였다. 한편 북측은 분배결과 통보를 통해 지원된 아동용 내의를 북한 전역 154개 시·군에 골고루 분배하였음을 알려왔다.

나. 비료지원

정부는 1999년 1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여 그간의 대북지원을 평가하고, 향후 대북지원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긴급구호성 식량지원과 병행하여 북한 식량난의 근원적 해결 차원에서 비료·종자·농약지원 등을 통한 북한의 농업생산성 증대 등 「농업개발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지원의 효과성·분배투명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는 또한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성과 함께 대북지원을 그간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보다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1999년 비료 15.5만톤을 지원하였으며 여기에는 남북협력기금 339억원과 대한적십자사의 국민모금액 123억원 등 총 462억여원이 소요되었다.

2000년에 들어 김대중 대통령은 1월 3일 “새천년 신년사”와 1월 26일 내외신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성의껏 제공하고 2000년에도 비료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월 9일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한이 화해·협력의 정신으로 실질협력관계를 넓혀가는 데 북한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우리측이 힘닿는 대로 북한을 도울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사정과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2000년 5월 6일 비료 20만톤을 북한에 지원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5월 10일 제6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비료 20만톤의 구입·수송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기로 하고, 비료구매·수송·인도인수 등 그 실행은 그간의 남북간 대북지원 관례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위임기로 결정하였다.

비료 20만톤은 5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28항차의 해로수송을 통해, 우리측 여수·울산·군산항에서 북한의 남포항(11만톤)·해주항(6만톤)·원산항(1.5만톤)·홍남항(1만톤)·청진항(0.5만톤)으로 각각 전달되었다. 종류별로는 복합비료 10만톤·요소비료 6만톤·이삭거름 3만톤·유안비료 1만톤이 각각 지원되었다. 비료 20만톤 지원에는 비료구매·수송비·기타 부대비용 등 총 635.7억여원이 소요되었다.

또한 정부는 이미 지원한 밀거름용 비료 20만톤의 식량증산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웃거름용 비료의 추가시비 필요성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의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국민적 기대감, 그리고 북한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웃거름용 비료 10만톤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추가지원 비료 10만톤은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4항차의 해로수송을 통해, 여수·울산·군산항에서 북한의 남포항(4.64만톤)·해주항(2.33만톤)·원산항(1만톤)·홍남항(1만톤)·청진항(1.03만톤)으로 각각 전달되었으며, 비종별로는 요소비료 4만톤·복합비료 3.6만톤·이삭거름 1.9만톤·유안비료 0.5만톤이 각각 지원되었다. 10만톤 지원시 비료구매·수송비·기타 부대비용 등 총 307.9억원이 소요되었다.

2001년 들어 4월 3일 UNDP는 특별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영농개시를 위해 시급히 요소비료 35만톤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고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4월 19일에는 북한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이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요소비료 20만톤의 조기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16일 제7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비료 20만톤의 지원을 국내수급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북측의 시비적기에 맞추어 최대한 조기에 완료하기로 하고, 5월 1일부터 6월 9일에 걸쳐 전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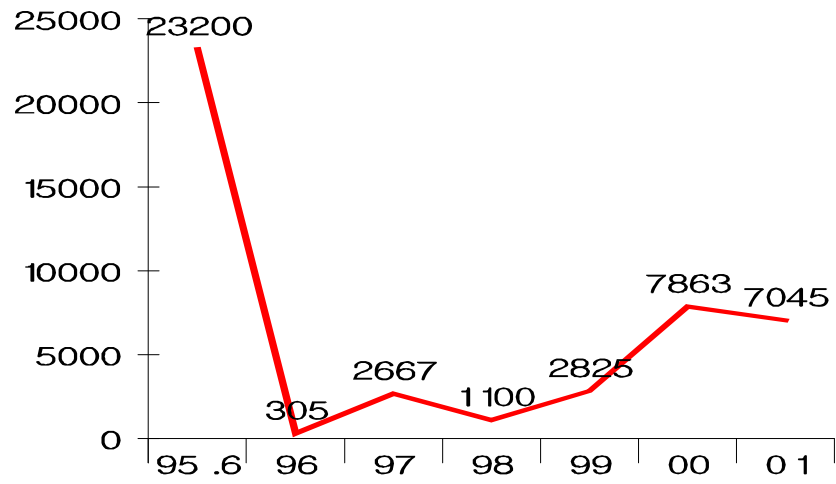
지원규모는 북측의 비료부족량 및 우리의 지원규모와 지원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0만톤으로 결정하였으며, 종류별 규모는 복합비료 11만톤, 요소비료 8만톤, 유안비료 1만톤으로 구성하였다. 우리측 선적항은 예년과 같이 3개 항이었으나, 북측의 하역항은 기존 5개에 송림항을 추가한 6개 항이었다.

비료지원 경비는 비료구입시비 600억원, 수송비 및 인도인수경비 38억원을 포함 총 638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지원경비는 전액 남북협력기금으로 집행하였다.

2001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약 10% 정도 향상되었는 바, 이는 좋은 기상 조건과 함께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비료를 적기에 지원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정부차원 대북지원 추이>

(단위: 만달러)



<정부차원 대북지원 현황>

(2001.12.31 현재)

기간	지원 규모	비 고
1995년	2억3,200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쌀 15만톤 직접 지원 - 1,850억원(1\$당 800원 적용)
1996년	305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P 200만달러(혼합곡물 3,409톤) - UNICEF 100만달러(분유 203톤) - WMO 5만달러(기상자재) - 24억원(1\$당 790원 적용)
1997년	2,667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P 600만달러(혼합곡물 9,852톤) - UNICEF 34만달러(ORS공장비용) - WFP 1,053만달러(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 UN기구 980만달러 · WFP 400만달러(CSB 8,389톤), UNICEF 360만달러(분유 781톤), WHO 70만달러, UNDP 120만달러, FAO 30만달러 - 240억원(1\$당 900원 적용)
1998년	1,100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P 1,100만달러(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 154억원(1\$당 1,400원 적용)
1999년	2,825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 11.5만톤 직접 지원 - 339억원(1\$당 1,200원 적용) * 한적 및 당국간 비료지원(3.30-6.22) 총 15.5만톤 462억원
2000년	7,863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 30만톤 직접 지원(944억원) * 20만톤(635.7억원), 추가 10만톤(307.9억원)
2001년	7,045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의 150만벌 직접지원(46억원) - 비료 20만톤 직접지원(638억원) - WFP를 통한 옥수수 10만톤 지원(223억원) -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제 지원(6억원)
계	4억5,005만달러	

2.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가.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기반 조성

1995년 9월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의 대북지원 허용조치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민간차원에서도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식량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계속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는 1997년 3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북지원 품목 확대와 경제단체를 통한 기업체의 대북지원 참여를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기탁성금이 증대되고, 지정기탁 등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1997년 4월 대한적십자사는 대북지원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제의하였다. 남북적십자는 199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2차에 걸친 대표접촉을 개최하여 5월 26일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로써 그간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던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남북간 직접전달 방식으로 전환되고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이 합의서는 남북간 구호물자 직접전달, 수송경로 및 대상지역 확대, 지원주체 명기, 지정기탁 등 그동안 국내 민간단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는 물론, 남북간 상호신뢰 조성 및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 1997년 7월 개최된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는 1차 지원에 이은 2차 지원 문제를 협의하고, 7월 25일에는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적십자간 2차분 지원 합의는 그간 1차분 지원과정에서 제기된 구호물자 검수방식, 분배과정 입회 및 분배결과 통보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남북간 구호물자 직접전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1998년 3월 베이징에서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개최하여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3.27)를 채택하였다.

나.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본격화

남북적십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통해 1995년 1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19차례에 걸쳐 496만달러(39억 7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1997년 5월 26일 남북적십자간 제1차 합의서 채택 이후 6월부터 7월 말까지 옥수수 기준 5만 3,800여톤의 식량을 북한의 신의주, 만포, 남양과 남포항, 홍남항을 통해 전달했으며, 이어 7월 남북적십자간 2차분 지원 합의에 따라 8월부터 10월 말까지 옥수수 기준 총 5만 2,800여톤의 구호물자를 제공하였다.

1998년 3월 중순에는 2차분 추가물량으로 17만달러 상당의 비료 800톤을 지원하였고, 이어 제3차 합의서 채택으로 3차분 대북지원이 4월에서 6월까지 추진되었다. 3차분 지원규모는 총 935만달러 상당으로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이 전달되었다. 아울러 9월부터는 3차분 추가 지원물량으로 1,133만달러 상당의 옥수수와 밀가루, 분유 등이 지원되었다. 특히, 3차 지원에서는 기존의 해로 및 제3국 경로 외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기탁한 한우 1,001두가 최초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전달되었다.(6.16, 10.27)

1999년에는 3월 1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비료지원 국민모금계획」 발표에 따라 1,027만달러(123억원) 상당의 비료지원 모금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재원으로 1999년 3~6월에 걸쳐 비료 4만여톤을 지원하였다. 이밖에 20여개 단체가 식량, 비료, 의약품 등 281만달러(33.7억원) 상당의 물자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북한에 전달하였다.

2000년에도 「3차분 추가 지원물량」이 계속 지원되었으며, 16개 단체가 참여하여 94만달러(113억) 상당의 의약품, 한우, 감귤, 농자재, 식량 등을 지원하였다. 2001년에는 사과, 배, 당근 등 농수산물과 못자리용 비닐, 의약품등이 한적을 통해 전달되어 1995년 11월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민간지원 총액 16,191만달러(1,960억원)중 8,386만달러(1,028억원)에 달한다.

남북적십자간 합의에 따라 우리측 민간단체가 지정한 구호물자 분배

지역(단체)은 1차 지원의 경우 북한의 9개 시·도 및 4개 단체, 2차·3차 지원시는 15개 시·도 및 13개 단체로 확대되어 북한 전지역에 우리 국민들의 동포애를 전하였다.

다. 민간의 자율적 대북지원 활성화

정부는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주민간 접촉 증대 및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기본방침하에 1998년 3월 18일과 9월 18일, 1999년 2월 10일과 10월 21일 4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조치 주요내용>

- 1998. 3.18 :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 대북지원 협의 및 분배확인 목적의 방북허용
 -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지원 허용
 - 언론사/개별 기업체의 협찬·후원 및 이벤트성 모금행사 지원
 - 1998. 9.18 : 한적을 통한 민간단체 개별지원 시범적 허용
 - 민간단체가 대북협의·물품구입·운송·모니터링 등을 직접 담당
 - 1999. 2.10 : 민간차원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
 - 준법성, 전문성, 분배투명성 등의 요건이 확보된 단체에 대하여 한적 이외의 독자적인 대북지원 창구로 허용
 - 기타 단체 및 개인은 한적창구를 통해 지원
 - 1999.10.21 : 민간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침 발표
 - 보건의료 및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과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기준 마련
- *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예관한규정(통일부고시, 1999.10.27 제정, 2001.2.10 개정)

이에 따라, 1998년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범국민운동’ 등 민간 관계자의 구호물자 분배확인 및 대북지원 협의를 위한 방북이 성사되었으며,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1998.4.25) 행사 등에 있어 언론사의 후원 및 ARS모금이 허용되었고, 북한에 제약공장·합영농장 설립 등의 사업 추진이 승인되었다.

1999년에는 민간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통한 민간대북지원 활동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구다원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민간단체 명의의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소량·적기지원이 가능하여 북한 농업개발 지원 등의 대북지원 사업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절차 간소화로 준비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조치 이후 1999년 12월말까지 ‘한국이웃사랑회’ 등 10개 단체가 개별 독자창구로 지정되어 67억원 상당의 물자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2001년에는 민간단체 독자창구가 19개로 증가하고, 이를 통한 지원 규모도 4,292만달러(55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분배 투명성 확보와 단체별로 특화된 전문적 지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정부는 1999년 10월 21일 보건의료,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 및 농업개발 지원 등의 분야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제6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10월 27일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예관한규정」(통일부고시)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도 한해 동안 한국JTS 등 8개 단체 9개 사업에 대해 54.1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내용별로는 농업개발 분야 5개 사업 27억원, 보건의료분야 2개 사업 16.5억원, 취약계층지원 2개 사업 10.6억원 등이다.

2001년에는 총 75.7억원의 기금지원이 결정되었다. 내용상으로는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의 씨감자 지원사업,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어린이 영양지원사업,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의 금강국수공장 및 생필품 지원, 평화의숲 양묘장 지원사업 등 농업협력사업, 보건의료사업, 일반구호사업, 환경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기금지원을 결정

하였다. 동 기금 지원 사업의 사업비중 남북협력기금은 2001년 12월 현재 30.3억원이 집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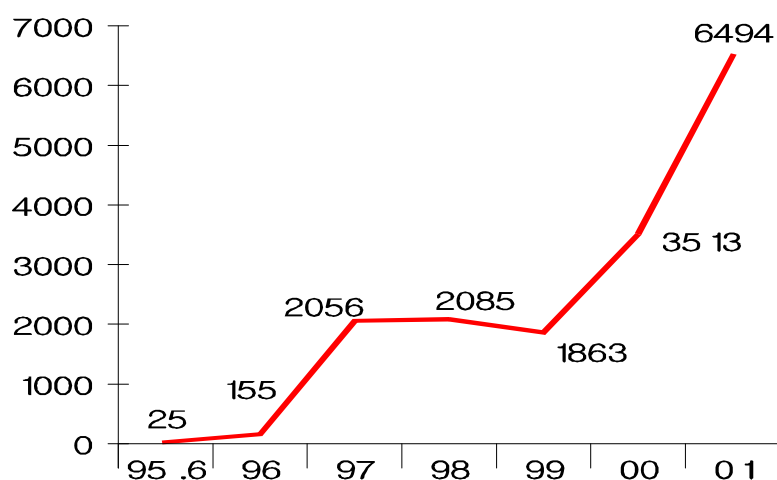
이같은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은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이를 양적으로도 이를 크게 확대되는 등 민간의 대북지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대북지원의 내용도 초기의 식량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농업 개발·보건의료·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원품목도 농자재·농기구, 전문의약품·의료기기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민간차원 지원사업은 물자지원 이외에도 북한측과의 공동생산 및 기술전수 등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자생력 회복지원으로 발전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단체 관계자 방북도 꾸준히 확대되어 1998년 34명에서 1999년 49명, 2000년에는 144명, 2001년에는 384명으로 증가하였다.

<민간차원 대북지원 추이>

만달러



<민간차원 대북지원 내역>

(2001.12.31 현재)

기 간	규 모	내 역
1995.11~ 1997.5 (國赤경유)	496만달러 (39.7억원)	- 밀가루 3,664톤, 분유 94톤, 담요 1만개, 식용유 18.6만ℓ, 라면 10만개, 양말 35,000켤레, 감자 1,900톤, 무종자 4.8 톤, 배추종자 6.4톤, 옥수수 4,980톤 * 1\$당 800원 환율 적용
1997.6~ 1997.7 (韓赤1차지원)	850만달러 (75.7억원)	- 옥수수 41,511톤, 밀가루 2천톤, 라면 15만상자, 비료 2천 톤(옥수수기준 53,841톤) * 1\$당 890원 환율 적용
1997.8~ 1997.10 (2차지원)	890만달러 (81억원)	- 옥수수 17,100톤, 수수 14,576톤, 밀가루 5,501톤, 식용유 27만ℓ, 감자 1,300톤, 이유식 96.74톤, 분유 100톤, 어린 이영양제 3만병(옥수수기준 52,888톤) * 1\$당 1,680원 환율 적용
1998.3 (2차추가지원)	17만달러 (2.8억원)	- 비료 800톤(옥수수기준 1,261톤) * 1\$당 1,680원 환율 적용
1998.4~ 1998.6 (3차지원)	935만달러 (130.9억원)	- 옥수수 16,585톤(정주영 10,495톤 포함), 밀가루 13,500톤, 식 용유 26만ℓ, 분유 111톤, 비료 2,500톤, 소금 1,000톤, 쌀 57톤, 씨감자 5톤, 양말 26,000켤레, 한우 500두(정주영), 비 닐 3.4톤, 초콜렛 14톤, 의약품, 앰블란스 1대(옥수수 기준 54,544톤) * 1\$당 1,400원 환율 적용

기 간	규 모	내 역
1998.9~ 1998.12 (3차추가지원)	1,133만달러 (141.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영 : 옥수수 39,509톤(95억원,톤당 24만원), 한우 501두 (사료 85톤, 물통 205개 포함 10억 9,400만원) - 민간단체 개별지원: 옥수수 4,010톤, 밀가루 2천톤, 백미 60톤, 분유 128톤, 설탕 34톤, 식용유 356,700ℓ, 젓소 200두, 사료 46톤, 비닐 50.8톤, 유리 984장, 의류 45,904매, X-Ray차 1대, 의약품 등(15개 단체, 35억 6,800만원) <p>* 1\$당 1,250원 환율 적용</p>
1999.1~ 1999.12	1,863만달러 (223.6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 비료지원(3차 추가지원 3.30~6.5) : 4만톤 123억 3,300만원 - 한적창구(3차 추가지원) : 24개 단체 33억 7,364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가루 3,139톤, 옥수수 4,015톤, 분유 42톤, 설탕 165톤, 씨감자 180톤, 식용유 15,845ℓ, 라면 9,930상자, 의류 215,448점, 의약품 등 - 독자창구(2.10~) : 10개 단체 66억 5,256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가루 1,051톤, 옥수수 4,000톤, 비료 1,484톤, 농기구, 젓염소 450두, 의약품, 의료기기, 의류 등 <p>* 1\$당 1,200원 환율 적용</p>

기 간	규 모	내 역
2000.1 ~ 2000.12	3,513만달러 (42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창구(3차 추가지원 : 16개 단체 113억 2,99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떡 20톤, 감귤, 의료장비 11종, 기초의약품 59종, 밀가루, 비료, 농약, 비료생산컨테이너, 구충제, 건빵, 한우 500두, 장난감, 분무기, 옷감, 의류, 이불,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 - 독자창구 : 13개 단체 307억 3,871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사랑회, 우리민족서로돕기, 월드비전, 한국JTS, 천주교민화위, 북한동포후원연합회(남북나눔), 유진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민족복지재단,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농약, 학용품, 수경재배자재, 가축, 사료 등
2001.1 ~ 2001.12	6,494만달러 (84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창구(18차) : 28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 3,150톤, 사과 4,000톤, 감자 5,000톤, 못자리용 비닐 552톤, 당근 2,000톤, 전지분유 23톤, 이유식 2톤, 항생제, 담요 759장, 내의 159만벌, 연어(치어) 55만마리, 구급차 10대, 포스팜 액제 등 - 독자창구 : 19개 단체 55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나눔, 유진벨, 월드비전, 한국JTS, 한국이웃사랑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옥수수재단, 불교종단협의회,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한민족복지재단,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새마을운동중앙회, 평화의 숲,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원불교 등 ·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농약, 학용품, 수경재배자재, 가축, 사료 등 <p>*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구충제(230만정) \$684,843(85,605만원상당)</p>
계	16,191만달러 (1,960억원)	

제3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 국내입국 추이

가. 국내입국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0년대 초반에는 10명 내외의 비교적 적은 인원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50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1990년대 말에 들어서는 100명을 넘어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에도 2000년의 2배 정도인 583명이 입국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입국규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2001년 12월까지 총 1,99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이 중 1,758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 입국 현황>

(2001.12.31 현재)

연도	1989 이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총 입국	사망· 이민 등	국 내 거 주
인원	607	9	9	8	8	52	41	56	85	72	148	312	583	1,990	232	1,758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이 계속 증가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또한 과거에는 국내 입국경로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입국방법 등도 제한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입국경로가 여러 국가로 다변화되면서 입국이 용이해짐에 따라 입국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내외 연고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가족단위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전체 입국자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2001년도 국내입국 유형별 현황 >

성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전체	36	16	49	35	57	57	59	38	52	56	82	46	583(명)
남	15	8	26	19	23	40	26	16	21	27	46	27	294(50.4%)
여	21	8	23	16	34	17	33	22	31	29	36	19	289(49.6%)

연 령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인원	43	91	158	172	54	25	40	583(명)
비율	7.4	15.6	27.1	29.5	9.3	4.3	6.8	100(%)

출신지	함북	함남	평안	양강·자강	강원	황해	기타	계
인원	380	83	43	30	15	17	15	583(명)
비율	65.2	14.2	7.4	5.2	2.5	2.9	2.6	100(%)

직업	관리직	전문직	예술·체육	노동자·농장원	봉사분야	군인	기타	계
인원	22	26	16	277	43	7	192	583(명)
비율	3.8	4.5	2.7	47.5	7.4	1.2	32.9	100(%)

2001년에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특징은 남·녀간 성별 분포에서는 남자가 절반 이상(50.4%)을 차지하고, 여성도 49.6%를 차지함으로써 전체 입국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별 분포는 20-30대가 다수(56.8%)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예년에 비해 청소년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여성들과 청소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주부·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입국자(56.4%)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

석된다. 한편, 출신지역은 함경도(79.4%), 평안도(7.4%)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출신계층은 노동자·농장원(47.5%), 부양·아동·학생 등 기타(32.9%)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 거주 및 정착실태

2001년 12월말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는 1,758명의 각 지역별 거주분포는 서울 42.4%, 경기·인천 19.9% 등 수도권 지역에 62.3%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그 외의 거주자는 지역 경상 7.1%, 전라 4.3%, 충청 6.9% 등에 이른다.

직업별 분포는 연구원 등 관리전문직이 2.8%, 회사원 등 사무직과 생산직 봉급생활자가 21.7%, 상업 등 자영업자가 4.3%, 학생·고령인구·주부 등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자가 41.8%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가 2000년도부터 취업보호제의 본격 시행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활·자립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은 점차 우리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다. 해외체류 실태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은 그 성격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대부분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소수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체류유형은 첫째, 식량획득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수일 내지 수주 정도 체류하다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단순 월경자, 둘째, 조선족 친척방문 등의 이유로 월경한 후 장기체류하는

자, 셋째, 일정한 거처 없이 장기간 은신생활을 하는 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탈북·체류유형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관계로 각 단체·기관에서 추정 발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언어상의 문제로 중국내 재중동포(조선족)가 집단 거주하는 동북3성을 중심으로 재중동포(조선족)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나 신분상의 불안감 등으로 수시로 거처를 이동하면서 은신·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자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식량 등을 구할 일시적인 목적으로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로서 난민협약상의 '난민'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처리는 자국의 주권사항으로서 제3국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 문제가 국내외적인 어려운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체류국과의 외교적 협상과 상호이해를 통해 이들의 보호·지원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2. 정착지원 체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국내 정착여부가 우리의 통일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모든 보호·지원정책은 전반적인 통일정책 구도하에서 추진하며, 둘째, 해외체류 탈북자는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자는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아래 체류

국 실정에 부합하는 보호·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셋째,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일회성의 물질적 지원보다는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며, 넷째, 정부차원의 지원과 병행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각종 민간·종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활동을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입국조치, 초기 자립지원, 사후관리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먼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본인의 보호신청이 있을 경우 현지 공관 등이 임시보호조치와 함께 국내입국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을 하게 되면, 보호결정을 한 후 사회적응교육, 취직, 정착지원금 지급, 주거알선 등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초기 자립지원을 하게 된다.

사후관리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편입된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정착지원과 신변보호로 구분된다. 먼저 정착지원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사회·종교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학교편입·공납금 지원, 자매결연 등의 각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다. 신변보호는 출신 신분별로 군인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관계부처에서 분리 담당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 협의회는 긴급현안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성격별로 정책·운영·교육훈련·정착지원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3. 정착지원 추진

가. 초기 자립지원

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자립·자활능력을 갖추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이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초기 생계지원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본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16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1인에서 5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가산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종류에 따라 2억 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지급지침에 의거하여 보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85㎡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주거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주거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1인에서 8인까지 구분하여 각 세대별 평형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에 편입됨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각 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영구·공공임대아파트를 우선해주고 있는데, 지방거주를 권장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자에게는 일정액의 지방거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 시설내 보호·지원

1994년 이후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기에 안정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응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시행을 통해 정착지원시설의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97년 12월 30일 부지 18,147평, 연건평 2,214평, 수용인원 100명 규모의 시설 건립에 착공하여 약 1년반의 공사기간을 거쳐 1999년 7월 8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준공·개소하게 되었다.

한편, 국내입국자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일시 수용인원 100명에서 250명 규모로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도에 하나원 증축이 완료되면, 연간 북한이탈주민 1,500여명의 보호·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원에서는 2-3개월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중점은 탈북 및 제3국에서의 은신·도피 생활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불안과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안정·정서순화에 두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해소에 교육중점을 두는 한편,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체험 교육과 진로지도, 운전·전산·요리·봉제 등 기초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단위 입국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여성·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

들이 사회진출 후 학교 및 가정생활에 바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기간 중 하나원 인근 초등학교에 취학시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민간단체 및 퇴직교사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별도의 학습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하나원」 주요 시설 현황 >

시설명	규 모	시 설 내 역
교육관	약 1,235평	o 강당,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자치활동실, 자원봉사실, 상담실, 고충상담실, 자료실 등 교육생의 사회적응교육 공간으로 활용
생활관		o 1인실, 2인실, 4인실, 별실, 특실, 가족실 등 교육생 생활공간으로 활용
봉사관	약 241평	o 숙소, 내무반, 정비실 등 시설관리 지원공간으로 활용

< 「하나원」 교육내용 >

<p>1. 정서·심리적 불안정 상태 해소</p> <p>o 탈북·제3국 은신·도피생활중 어려움 및 입국후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상태 불안</p> <p>- 인성·적성검사를 통한 개별심리상태 파악 및 심리안정·순화프로그램 운영</p> <p>2. 문화적 이질감 해소</p> <p>o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상존</p> <p>-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이론교육·현장학습 등 체계적인 사회적응 교육 실시</p> <p>3. 진로지도 및 취업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직업훈련 강화</p> <p>o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전기간동안 진로지도 필요</p> <p>- 전산·운전·요리·봉제 등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기능훈련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점 편성·운영</p>	
--	--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에서 하나원 운영에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연령·학력·출신 등이 매우 다양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은 민간의 참여 없이는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민간에서는 정규프로그램 이외의 주말·휴일프로그램은 물론 일반 국민들과의 다양한 접촉기회를 가질 수 있는 1일 현장체험, 지방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종교·시민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1999년 7월 하나원이 준공된 이후 총 789명이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한 후 사회에 진출하였으며, 2001년 12월말 현재 14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교육을 받고 있다.

<하나원 교육생 입퇴소 현황>

(단위:명)

구분	1기	2기	3기	1999계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2000계
입소	20	9	32	3개기 61	41	27	30	41	49	48	61	7개기 297
퇴소	19	9	(32)	2개기 28	41	27	30	41	49	(48)	(61)	6개기 220
구분	11기	12기	13기	14기	15기	16기	17기	18기	19기	2001 계		
입소	59	53	70	66	74	59	48	64	79	9개기 572		
퇴소	59	53	70	66	74	59	48	3	0	8개기 541		

* () 숫자는 입·퇴소 년도가 다른 퇴소생 수

* 총 입소인원 930명중 남 509명(54.6%), 여 421명(45.4%)

* 18-19기는 2001년말 현재 교육진행중이며, 18기 3명은 개인사정으로 조기퇴소

4. 법·제도개선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크게 증대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보호·지원이 요청됨에 따라 1997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1998년 이 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초기정착금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1999년에는 법률을 개정하여 자립지원 방안을 대폭 강화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정착에 있어 가장 핵심적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취업보호제의 실시, 노령연금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업지원제도의 도입,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의 활성화 등이다.

민간차원에서도 각종 후원·결연단체를 네트워크화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민간단체별 전문적 분야별로 적응지원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하여 보다 더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2001년도에 지역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이 밀집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지원단체로 구성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조직 중에 있다. 이 협의회를 통해 사회로 편입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화된 사회적응 정착프로그램, 지역사회에 안내 및 적응지원, 대상별 직업훈련 알선과 취업확대, 전문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입국자들이 증가하는 현 추세와 점차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이러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수준은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완비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체계는 지방·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위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

할을 확대하고, 정부주도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차원의 제도적·가시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본인들의 확고한 자립·자활의지 및 정착 노력과 함께 이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해주는 국민 모두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제4절 북한인권·환경문제 개선 추진

1. 북한인권문제

2001년에는 국제기구 및 국가, NGO(비정부기구)에 의한 북한인권 관련 문제제기와 논의가 지난 해 보다도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이에 대해 북한도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기구 차원에서는 2001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제57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미국, EU, 캐나다, 노르웨이 대표 등이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하였고, 제7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7월 19일에서 20일에 걸쳐 북한의 「ICCPR」(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차 정기보고서 심의가 있었으며, 6월 13일 개최된 EU와 북한과의 인권회담 및 10월 27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정치대화가 있었다. 또한 미국무성이 2월과 10월에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의 발표하였으며, Amnesty International(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 NGO에서도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하였다.

특히, 제7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이 1983년 이후 16년 만인 2000년 3월에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실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북한은 이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및 심리과정에서 공개처형 사실을 최초로 시인하여, 1992년 10월 함흥에서 친조부모를 살해한 ‘주수만’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공개처형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주민들의 시위 및 집회 횟수, 언론 출판자유 실태, 종교별 성직자 현황, 해외여행 관련 신청 및 기각 현황 등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한편, 2월 27일에는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및 ‘고문 및 가혹행위금지에 관한 협약’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인권협약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 NGO에 의한 북한 인권문제 언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국무성은 2001년 2월 27일 ‘2000년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며, 특히 1995년 이후 식량부족으로 인권보장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평가하고, 또한 과도한 군사비가 경제회생노력의 장애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기아는 혼란과 광범위한 영양부족을 야기하였으며, 기아와 이에 따른 질병으로 약 백만명이 사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2001년 10월 25일 발표된 ‘국제종교자유보고서 2001’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적 자유란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2000년 국무성의 종교자유보고서를 재확인하고 USCIRF(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가로 지정하였다.

Amnesty International(국제사면위원회)는 ‘곤란에 처한 탈북난민’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탈북자 실태와 강제 송환된 탈북자 7명의 인권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면서 중국과 북한당국의 태도를 지적하였다. 중국 당국에 대해 AI는 유엔 난민협약을 준수할 것과 탈북자의 인권보호, 난민을 부정하는 북·중 양자협약을 철폐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북한당국에 대해서는 망명과 관련된 형법 및 관련 규정을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12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탈북자 색출활동 금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허용, 고문방지 및 가혹행위 금지에 관한 협약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난민인정과 탈북자 인권보장을 위해 나서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Freedom House도 ‘2000-2001 세계자유상황 평가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서

각각 자유 수준이 가장 열악(Not Free)한 7등급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북한인권 개선과 탈북자 등 난민구호를 목표로 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2001년 10월 25일 창립선언을 채택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 위원회는 창립 선언에서 “북한의 인권 부정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대북지원 식량의 분배에 대한 검증, 대북 경제원조와 인권 개선의 조건부 연계 추진, 탈북자 처벌금지 및 중국내 탈북자 정치난민 자격 인정,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정보개방 방안 등 7대 활동 과제를 제시했다.

국내 민간단체들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및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약칭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등 국내의 민간인권단체들도 국제 NGO들에 대해 북한인권 실태와 관련한 정보자료 제공 등 홍보활동을 비롯하여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워크숍·포럼 개최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인권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 정리 등 정보자료의 체계화 및 국제사회의 관심환기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국내 NGO의 자료발간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측면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국제인권기구 회의에 참석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2001년 3월 29일 제57차 UN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인권대사로 임명된(2001.1) 박경서 대사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기조연설을 실시한 바 있다.

2. 북한환경문제

환경전문가들은 북한의 환경은 환경의식 부재와 환경개선 투자부족 등으로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석탄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폐광·해안간척·공장 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식량증산을 위한 다락밭 개간과 연료림 채취 등이 북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다.

오늘날 북한 환경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 전체, 나아가서는 동북아 공동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환경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남북한이 상호 협력할 때 그 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남북환경협력을 통한 북한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북환경협력은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해 환경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관심도 다소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지원 및 양묘장 조성사업 지원 등 산림분야에서의 민간 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들어, 강원도가 금강산 지역(삼일포 일대) 1,000ha에 대한 솔잎혹파리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나머지 지역에 대한 방제작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묘목조성사업은 동북아 산림포럼이 6월 20일에는 UNDP(두만강개발계획)가 추진중인 AREP(농업복구 및 환경보전사업) 14개 양묘장 복구사업에 참여한다는 양해각서를 UNDP와 체결한 바 있으며, 그동안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한 묘목지원 사업을 추진해온 ‘평화의 숲’도 평양인근지역 양묘장 시설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평화의 숲’ 양묘장 조성사업에 1억2,4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8월에는 민·관 합동으로 남북환경교류협력을 위한 토론회 장인 ‘남북환경포럼’을 출범시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남북환경교류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발굴 등 환경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희귀한 인류전체의 자산인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며,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에 대한 남북공동 생태계조사를 지속적으로 제의하는 등 환경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